

인구 상·하한선 탄력 적용 '농어촌지역구 살리기'

선거구획정 어떻게 돼가나

내년 4월 총선거의 선거구획정 작업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지역구·비례대표 의석수 배분에 대한 여야 간 입장차가 여전히 크고 농어촌지역 의원이 농성까지 하며 농어촌에 대한 배려를 요구하면서 합의 도출이 어렵게 된 때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는 총선 6개월 전인 오는 13일까지 선거구획정안(이하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국회는 이 획정안을 총선 5개월 전인 내달 13일까지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

4일 정치권과 획정위 등에 따르면 획정안 국회 제출 예정시한이 9일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여야는 획정위에 전해줘야 할 선거구획정 기준과 지역구·비례 의석수 등 의원정수에 대한 논의를 진척시키지 못하고 있다.

물론 획정위는 이번 주 초 전체회의를 재소집, 농어촌 지역 배려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하기로 하는 등 법정시한 내에 획정안을 제출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획정위는 지난 2일 전체회의에서 지역구 수를 정하려 했으나 농어촌지역 배려 방안과 권역별로 지역구 수를 배분하는 과정에서 의견이 엇갈려 최종 결론을 내지 못했다. 특히 현행 공직선거법 상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는 것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하겠다고 밝힌 그 결과에 따라 논란이 예상된다.

획정위는 또 농어촌 지역구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거구획정 기준의 대원칙인 '하한·상한 인구 산정 방식'을 변경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구가 적정 규모인 특정 지역구를 하나 선택해 하한선으로 잡고, 이를 기준으로 상한선을 정하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현재보다 '하한·상한 인구'가 다소 높아지거나 또는 낮아지게 된다. 상·하한 인구가 지금보다 다소 높아진다면 본

획정위 지역구 수 못 정해

국회 제출 시한 넘길 수도

비례대표 여야 대립도 첨예

구 대상이 되는 수도권 지역구 숫자가 다소 줄어든다. 그만큼 농어촌 지역구의 숫자는 덜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반면 상·하한 인구가 지금보다 낮아질 경우 인구 하한 미달로 조정 대상 선거구에 포함됐던 농어촌 지역구의 일부가 살아남게 된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획정위가 13일까지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하더라도 내달 13일까지 본회의에서 획정안이 의결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의원정수를 고정한 상황에서 여야 모두가 만족할 만한 획정안이 나오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개별 의원 및 지역, 각 당의 이해관계로 인해 정개특위가 수정·보완을 요구하고 획정위가 재획정안을 제출하더라도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선거구 획정작업이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때문에 새누리당 원유철,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오는 5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내년 20대 총선에 적용될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담판을 시도한다.

회동에서는 획정위 논의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는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비율, 농어촌 지역구 감소 문제가 핵심 의제가 될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농어촌 지역구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례대표를 줄이고 주장하고, 새정치연합은 비례대표를 줄일 수 없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또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 및 안심번호 국민공천제 등 공천률까지 복잡하게 얽히면서 상황은 더욱 불투명하게 흘러가고 있다. 이로 인해 여야 내부에선 의원정수를 늘리는 방안도 진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계속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아직 못 정했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위원장 김대남은 지난 2일 내달 4·13 총선에 적용될 지역 선거구 숫자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날 서울 관악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에서 열린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친 김대남 위원장이 밖으로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새정치 중도인사 '통합행동' 결성

김부겸·송영길·박영선 등... '통합전대론' 목소리

문제인 대표의 재선임 카드에 수세에 몰렸던 새정치민주연합의 비주류가 전열 정비에 나서고 있다. 그동안 계파 투쟁에서 한발 물러서 있던 비주류 중진과 중립지대 의원까지 대거 참여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우선, 김부겸 전 의원을 비롯해 송영길 전 인천시장, 박영선·민병두·조정식·정성호 의원, 김영춘·정장선 전 의원 등은 최근 몇 차례 모임을 열고 가정 '통합행동'이라는 모임을 결성했다. 진노(진노무현)와 비노(비노무현), 진보와 보수를 넘어 통합의 물결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만든 모임이다. 상대적으로 주류·비주류 갈등에 거리를 두던 중립 성향의 무개입 있는 인사들이 대거 참여했다는 점에서 정치적 무게감이 다르다.

특히, 박영선 의원 등 통합행동 내에서는 '통합전대론'을 거론하는 목소리도 있어 주류 진영에서 촉각을 곤두세우

고 있다. 내년 총선에 대비해 무소속 전정배·박주선 의원, 정동영 전 의원 등 당 밖의 인사가 모두 참여하는 전당대회를 내년 1월까지 치르자는 것으로 비주류 일각의 '조기전대론'과 맥이 닿아 있다.

이와 함께, 당내 초·재선 소장계파와 모임인 '더좋은미래'에서는 조기 선대위 구성 주장을 내놓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내 세력을 결집시키려면 통합 선대위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통합선대위에 최고위원회 권한을 다 위임시켜 실질적 권한을 행사, 진노와 비노의 갈등 구도를 피해가자는 방안이다.

그동안 전면에서 문 대표 체제와 각을 세우는 안철수 전 공동대표 등도 주류를 향한 압박의 강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국감 이후, 내년 총선 공천을 놓고 주류와 비주류 진영의 막판 살바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혁신안, 재보선 원인 제공 무공천 한다더니

함평 전남도의원 보선

새정치 후보 공천 눈총

새정치민주연합이 2일, 오는 10·28 전남 함평 도의원 보궐선거에 자당 후보를 공천하려 해 눈총을 받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함평 도의원 보궐선거 후보 공천을 위한 경선을 실시키로 의결했다.

이 지역은 지난해 전남지사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 과정에서 노종석 전 도의원이 당비 대납 문제로 인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유죄 선고를 받는 바람에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 곳이다.

이를 놓고 재보선 원인을 제공했을 때 해당 지역에 공천을 하지 않는다는 혁신위원회의 혁신안과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나 최고위원회가 혁신안을 처리하면서 선거법 위반을 무공천 사유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공천을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혁신위는 당초 당헌 개정안의 무공천 사유에 부정부패 사건과 함께 금전과 관련된 선거법 위반 사건까지 포함시켰지만 최고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선거법 위

반 부분이 삭제됐다는 것이다. 당 관계자는 "상당수 당선무효형이 선거법 위반에서 비롯된 사건이 많은데 이런 사건까지 무공천 사유에 포함시키면 당의 타격이 너무 크다고 판단해 선거법 위반 부분을 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이 재보선 원인 제공 무공천 제도 도입을 부정·부패 정산을 위한 혁신안으로 선전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결국 '반쪽짜리 혁신안'으로 전락했다는 비판론도 나온다. 실제로 이날 최고위에서 후보 공천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호남의 민심 이반론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함평 선거에 질 경우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무공천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었다는 후문이다.

문재인 대표는 찬반이 엇갈리자 '지역위원장의 의견을 존중해 주지'며 후보 공천 쪽에 힘을 실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농어촌선거구 축소 黨이 막아달라”

전남·북 의원 10명 文대표 면담·목포시 선거구 재편 반대

주 의원도 “호남이 5석 가까이 의석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호남의 불이익이 크다”며 “비례대표를 줄이더라도 농어촌 지역구 숫자 축소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건의를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문 대표는 농어촌 대표성을 훼손해선 안 된다는 원칙에 공감하는 수준의 원론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전남북 의원들은 지난달 28일 여야 대표 간 '부산 회동'에서 문 대표가 비례대표 수를 줄일 수 없다는 의견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에 대한 유연한 입장을 취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문 대표는 부산 회동에서 비례대표 의석 수를 줄일 수 없다고 주장하지 않았다고 해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남도의회가 '농어촌 의석수 감소 백지화'를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목포시도 공식 입장을 내놨다. 목포시는 지난 2일 보도 자료를 통해 “무안·신안·나주를 하나의 국회의원 선거구로 재편하는 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박홍률 시장은 간부회의에서 “무안반도를 이루고 있는 목포와 무안, 신안은 뿌리가 같고, 정치적·경제적으로 동일권역”이라며 “선거구를 정치적으로 획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강조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http://www.damyangbamboo2015.kr

2015담양 세계대나무박람회
World Bamboo Fair Damyang KOREA 2015

2015. 9.17~10.31 죽녹원·전남도립대

주최: 담양군,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후원기관: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광주본부세관

협력기관: WORLD BAMBOO, GIEF, 국립전라남도농업기술원, 광주광역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후원사: NH 오뚜기, 오만건설, KB국민카드, 우리민심, 천일여객그룹, SupadElixir, 추성교육, 죽향도가, 대술이출명농조합법인, 호저가, (주)대나무건강나라